

윤 대통령 “북 핵개발 물자 불법조달 대응에 굳건한 협력”

106개국 참여 PSI 고위급 회의
제주도서 개막...공동성명 채택
한미정상 영상 축하 메시지
바이든 “잘못된 손에 무기 들어가”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계속 조달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우리의 협력은 더욱 굳건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주도에서 개막한 확산방지구상(PSI) 20주년 고위급 회의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은 커지고 있으며 국제 안보환경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전례 없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와 WMD 확산 방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PSI 고위급 회의가 개최되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또 “대한민국 정부는 인류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고 국제법과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여기 계신 파트너국들과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이 대독한 축하 메시지에서 WMD 확산 방지·대응·중식을 위한 의지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WMD 확산 방지를 위한 규범을 모니터링하고 이행하는 국제안보체제에 지속해서 도전을 가하는 국가가 전 세계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무기가 잘못된 이들의 손에 들어갈 위험은 여전히 너무나 많은 곳에서 지속적이고 심각한 우려로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또 “한 국가만의 행동으로는 이 도전에 대응할 수 없다”며 “새롭게 부상하는 확산 위협에 주목하면서 PSI를 더욱 확대하고 성장시켜야”고 강조했다.

PSI는 WMD와 그 운반 수단, 관련 물자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2003년 미국 부시 행정부 주도로 출범한 국제 협력체제로 현재 10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5년 주기로 모든 회원국이 참석해 그간의 활동을 점검하는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는데 20주년을 맞아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리게 됐다.

회의는 이날부터 나흘간 제주도에서 열리며 아태 순환훈련 ‘이스틴 엔데버 23’ (EASTERN ENDEAVOR 23)도 개최된다.

미국은 PSI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직접 출범시킨 구상이라는 점을 감안해 고위급 회의 때마다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2002년 스커드미사일 발사를 신고 예멘으로 향하던 북한 화물선 서산호가 미국의 정보 제공으로 스페인 해군에 적발됐지만, 예멘 당국이 미국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결국 무사 통과된 사건이 PSI의 발단이 됐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확산방지구상(PSI) 참여국들은 신형 기술 부상과 안보환경 변화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날 고위급 회의 참가국들은 “국제 전략 및 안보 환경에 대한 최근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PSI 참여국들의 비확산·반확산 노력이 있어 더 큰 주의와 협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이런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은 “신형 기술과 새로운 확산 관행의 부상이 야기한 영향 및 도전들,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PSI 차단원칙’의 틀 내에서 고려하고, 이런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한 PSI 차원의 최적의 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PSI가 암호화폐를 동반한 확산금융, 무형기술이전, 확산 행위자들의 국제법 위법 발발 등 새로운 확산 관행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3D 프린팅,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의 중요 신형 기술이 추가적인 비확산·반확산 관련 도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며 기술의 진화에 따른 영향 및 도전과제를 검토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을 재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재의요구’ 간호법,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최종 폐기

찬성 178·반대 107·무효 4명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이었다.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이 골자로 의료인 내부 지역 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온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통과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 법안에 대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로 재의를 요구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이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일찌감치 ‘당론 부결’을 정했기 때문에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안건을 상징하기 위해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등 167명이 서명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2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안건이 본회의에 추가 안건으로 상징돼 표결에 부쳐졌다.

국회법 등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가결되면 해당 추가 안건은 국회의장 동의 없이도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1호’로 기록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지난달 같은 절차를 거쳐 재투표에 부쳐진 끝에 폐기된 바 있다. /연합뉴스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내달 12일 표결 전망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하며,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번 본회의에 상정·표결된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6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12일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날 검찰에 체포동의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난 26일 이를 국회에 송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열 수 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총 60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 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강씨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 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돈 봉투 의혹이 확산하자 이달 초 민주당에서 자진 탈당했다. /연합뉴스

전원위 내 소위원회 구성 무산... ‘선거제 개편’ 6월에도 힘들 듯

여야 물밑 협상 최종 결렬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이 무산됐다.

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혁위)에 따르면, 여야는 전원위 소위 구성 문제를 두고 물밑 접촉을 해왔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정개혁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실상 소위 구성은 안 하는 것으로 정립됐다”며

“늦어도 6월 중에는 합의된 선거제 개혁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여야 간 대화가 중단되면서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중순 김진표 국회의장 제안에 따라 20년 만에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었다. 전원위는 앞서 정개혁위가 마련한 3가지 결의안을 토대로 백가쟁명식 토론을 벌였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이에 전원위에 소위를 별도로 구성, 최종 압축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개혁위가 넘겨받아 의결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그러나 소위 구성을 위한 여

야 논의는 한 달 넘도록 공전했다.

간호법 제정안과 같은 쟁점 법안은 물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 정국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선거제 개편 논의가 뒷전으로 밀린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개혁위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과거 사례를 봐도 선거제는 결국엔 여야 지도부 협의가 필요한 것이라 전원위 소위를 거칠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도 많았다”며 “야당 지도부 협의를 거쳐 정개혁위 간사들이 최종 압축안을 내는 방식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전원 리모델링, 갈라강판 지붕공사,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MD MODERN
사무실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광역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